



노조파괴 앞잡이 노동부, 법원이 철퇴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조직형태 변경 무효” ... 포항지부, “포스코 노동자 권리 위해 투쟁”

금속노조가 노동부가 노조파괴에 앞장선다면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11월 6일 오전 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절차상 위법 묵인, 노동부의 신중 금속노조 파괴 기획 행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자주노조 설립 신고’를 승인한 노동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황우찬 금속노조 포항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노동부가 잘못된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이번 조직형태변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계기로 공무원들은 정치권 눈치 보지 말고, 옳은 일과 틀린 일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부 장관은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앞장서기 위해 존재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절차상 위법을 알고도 모두 묵인하며 포스코라는 철강업종을 상징하는 기업에서 금속노조 깃발을 뿌리째 뽑아내기 위해 법과 상식을 모두 던져버린 윤석열 정부의 노조파괴에 앞장선 노동부는 즉각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지난 2022년 11월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는 금속노조 탈퇴를 걸고 조직형태변경 조합원 찬반 투

표를 진행해 가결했다. 탈퇴를 주도한 이들은 총회 가결 이후 노동부 포항지청에 노조설립 신고를 했다. 포항지청은 지회가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안을 주문하다, 12월 포스코지회의 노조설립신고를 최종 반려했다.

노동부가 절차상 하자로 포스코자주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하자, 보수언론과 국민의 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반하는 노동부’라며 노동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2022년 12월 26일 노동부 장관은 금속노조가 포스코지회 집단탈퇴를 막았다며 금속노조 규약에 시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운영을 정부가 개입·통제하겠다고 선전포고한 것이다.

올해 3월 24일 경북지방노동위는 보수세력이 압박하자 금속노조가 포스코지회 임원 세 명을 노조 규약 위반으로 제명한 징계에 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4월 12일 서울지방노동위는 금속노조가 하부조직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5월 25일 포스코지회는 금속노조 탈퇴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다시 소집했다. 6월 2일 임시대의원대회 자리에서 겨우 세 명뿐인 대의원 찬성으로 기업노조로 조직형태변경과 금속노조 탈퇴를 의결했다. 포스코

지회 과반수 33명의 조합원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총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탈퇴를 주도한 이들은 조합원의 요구를 무시했다.

금속노조는 즉각 노동부에 절차가 위법하다며 노동부에 문제제기했으나, 노동부는 ‘대의원대회는 총회를 갈음할 수 있으며, 따라서 포스코지회가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한 절차는 유효하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조직형태변경으로 노조할 권리를 빼앗긴 포스코지회 조합원들은 조직형태변경 결의 무효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6월 12일 노동부 포항지청은 금속노조 탈퇴를 주도한 이들이 낸 ‘포스코자주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정부 압박으로 승인했다.

10월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조직형태변경은 대의원대회 역할이 아니며, 총회 없이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포스코지회 조직형태변경은 유효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금속노조 탈퇴 의결 효력을 정지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기자회견을 마치며 “금속노조와 포스코지회는 윤석열 정부의 노조파괴에 맞서 금속노조 푸른 깃발을 지켜내고, 포스코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당당히 맞서겠다”라고 천명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진정 기각하겠다”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 심의 중인 사건 공개 발언 ... 지회, “노동자 인권 차별, 기피신청”

금속노조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이 국가인권위원회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단수 조치 진정 사건에 대한 이충상 상임위원 기피신청서’ 를 전달했다.

금속노조 등은 11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인권보장 촉구, 이충상 인권위원 규탄 공동 기자회견’ 을 열었다.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상임위원은 10월 30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하지 않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조 진정사건에 대해 “기각하겠다” 라고 공개발언 했다. 인권위법 49 조는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라고 돼 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들은 지난 9월 8일 회사가 저지른 노조 사무실 단수 조치에 대해 9월 11일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지회는 인권위 상임위에서 이충상 등이 반대해 논의를 진척하지 않자 진정을 신청했다.

금속노조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은 “심의 중인 진정 건에

기각 운운하는 이충상 위원이 인권위 소위원회에 있는 한 공정한 심의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 라며 “인권위는 노동자 인권 차별 발언한 이충상을 심의에서 제외하라” 라고 촉구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가 1년제 농성을 이어가고, 2개월째 단수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라면서 “반인권 행위를 자행하는 인권위를 규탄하며 이충상위원의 사퇴를 요구한다” 라고 강조했다.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노조 사무실 물이 끊긴 이후 마시는 물은 고사하고 화장실 물조차 아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다” 라며 “회사가 빼앗은 인권을 지키고자 인권위에 호소했으나 인권위조차 우리를 시험

하고 있다” 라고 개탄했다.

최현환 지회장은 “회사는 단수를 인권탄압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라면서 “인권위가 한국옵티칼에서 벌어지는 자본의 야만적 인권탄압에 눈감으면 존재할 필요가 없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숙 인권네트워크바람 활동가는 “이충상은 성 소수자를 혐오하는 발언을 하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발언 등을 했다” 라며 “국제인권기준을 무시하고, 인권위를 뒤흔들고 있다” 라고 규탄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일본 닛토덴코 자본의 먹튀 청산으로 280일째 구미공장에서 농성 중이다. 공권력 위협과 사측이 동원한 철거 업체의 도발을 겪고 있다.